

데스크탑

‘젓과 꿀이 넘쳤던’ 지방선거 13일의 고흥



정근산

기획탐사부장

며칠 전 막을 내린 6·1 지방선거에서 전남은 58.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 7회 지방선거(69.2%)와 비교하면 10.8%포인트 낮은 수치지만, 그럼에도 전국 최고를 찍었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는 고흥이 77.8%라는 압도적 투표율로 전국 최고를 견인했다. 전남, 그중에서도 고흥의 높은 투표율의 이유는 뭤까.

후보 명함은 ‘식권’ 혼탁의 끝

무소속 현직 군수와 4년 전 고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리턴매치. 1년 전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무소속 도의원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 재대결. 여기에 다수의 무소속 후보들과 민주당 간 대진표가 짜인 군의원 선거까지. 기초의원부터 단체장까지 치열하게 맞붙은 대결구도는 투표율을 끌어올렸고, 진영 간 세대결도 그만큼 치열했다. 필자가 취재 등을 위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9일부터 31일 자정까지 13일간 고흥 현지에서 지켜본 모습도 그랬다. 말 그대로 사투였다. 아니 그보다 더 정확히는 지방선거, 특히 군 단위 시골 선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낯 뜨거운 구태의 모 든 것이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설욕을 위해 표밭을

누빈 민주당 후보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선을 노린 현직 간 리턴매치가 치러진 군수 선거전을 보자. 인구소멸 등 직면한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은 언감생심. 그저 ‘민주당’을 외치는 후보와 운동원, ‘한번 더’를 소리치는 유세차량 행렬이 전부였다. 그나마 반짝했던 양측의 대결도 현 군수 재임 기간 수의계약 몰아주기, 재산 증식 등을 둔 공세와 이에 맞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비방 혐의로 이어진 검찰 고발 등 질 낮은 네거티브로 채워졌다. 전남도의원 선거는 8회째를 맞는 지방선거가 무색하게 여전히 존재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이었고, 군의원 선거는 후보자들의 파렴치한 전과들이 넘쳐났지만 이 역시 개의치 않았다.

고흥 지방선거의 진면목은 해가 진 뒤다.

전국 최대 산지인 마늘작업과 모내기, 특산물인 다시마 생산 등 1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임에도 날이 어둑해지면 고흥 행정의 중심 고흥읍과 경제의 중심인 녹동읍 식당가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지방선거 관련 모임이 아닌 개인 단위 손님은 아예 받지 않을 정도.

많은 100여명에 이르는 열두 띠 갑계 모임은 하루가 멀다하고 열렸고, 마을별 노인회, 청년회, 수산인회, 농업인회, 부녀회 등 불일 수 있는 이름의 친목 행사는 13일의 선거 기간을 꼬박 채웠다. 오죽하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밥자리, 술자리가 지겹다는 주민들이 속출했을까. 모임을 주관하는 이가 내민 후보자의 명함이 ‘식권’으로 불리고, 사람이 아닌 표가 모인 식당가를 뱅글뱅글 도는 후보자와 운동원들로 인해 문턱이 닳을 정도였으니 그 정도가 어땠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터. 모처럼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애써 모른척 하는 선관위 등의 통 큰 인심은 감시의 눈을 아랑곳 않는 후보자들의 ‘밥 선거, 술 선거’를 부추겼고, 시골의 기이한 선거풍토를 처음 접한 도시의 귀농·귀촌인들은 연신 “이게 무슨 일이나”를 되뇌었다.

그들만의 4년이 되지 않기를

고흥 16개 읍면 소재지와 주민 수가 많은 주요 마을은 거나한 밥자리, 술자리가 파란 뒤에 도 쉬어 잠들지 못했다. 돈 봉투 살포를 잡기 위한 각 후보자 진영의 운동원들이 주요 길목을 지켜 선 채 차량 번호를 적거나 대조하는 모습들이 새벽녘까지 이어졌고, 후보자가 탄 소위 ‘1호차’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웃픈 풍경도 반복됐다. 그만큼 각 후보자와 캠프의 날이 서고 신경이 곤추서는 ‘돈 선거’가 판을 쳤다는 반증. 마을 이장이 대신 찍어 보내는 거소투표와 승합차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끌고와 표를 실어 나르는 사전투표의 관행은 차라리 예고 수준으로, 누구는 열마를 썼고 또 누구는 열마를 베풀었다는 풍문들이 넘쳐났다.

그렇게 뜨거웠던, 아니 ‘젓과 꿀이 넘쳤던’ 고흥의 지방선거는 끝이 났다. 승자와 패자가 갈렸고 희비도 엇갈렸다. 새로 군수가 뽑혔고, 새로운 도의원과 군의원도 선출됐다. 그렇게 민선 7기가 저물고 민선 8기 시작을 앞두고 있다. 허나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4년이 그간 뿌려낸 ‘식권’ 들을 되찾고, 새벽녘까지 길목을 지켜 이들의 주머니만을 채워주는 4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저 바랄 뿐. 필자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기를...

기고

명절에 떠난 옆집 누나, 지방을 떠나는 젊은이



정금호

전남대 공학대학장

예전 옆집 누나는 명절 때 소주 몇 병과 설렁한 봉지를 가지고 귀향한 친구가 부러워 그 친구와 함께 명절 말미에 마을을 떠났다. 보다 좋은 수입을 위해 몰래 밤 붓짐을 썼던 것이다. 그녀의 남동생은 좋은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난 이후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이촌향도(離村向都, Rural Exodus)가 시작됐고 우리는 시골을 버렸다. 그때 주변에 일자리가 있었다면 누나는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학교가 있었다면 그녀의 남동생은 현재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였고, 일자리 및 교육에 의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던 때였고, 자본이 축적되지 않고 인구가 동경향이 없던 시대였다. 그렇게 우리는 지방 문화를 파괴하며 도시화를 맞이했다.

80년대 압축성장시대에 겪었던 사회변화 못지않게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종주도시화(宗主都市化: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현상) 확산, 수도권 경제지배 등의 또 다른 사회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2021년 전국대학은 신입생 4만 586명이 미충원됐다. 미충원 현상은

대부분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전남대 규모의 대학 8곳에 신입생이 없는 형국이다.

그 여파는 주변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 3월, 설립된 지 70여년 된 전북소재 사립대에서 4개학과를 폐교한다고 발표했다. 역사와 전통과는 무관하게 지방대학이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다.

대학의 폐과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4월 영국의 미들섹스 대학교는 철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매년 12명 정도 된다는 이유에서, 철학 전공과정을 폐지하려 했다. 폐지하려는 이유가 철학과에 쓰일 돈을 다른 학과에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정된 재정을 특정 분야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세계관이 만연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적 논리에 근거해 입시경쟁력이 없는 학과들의 폐지 논의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폐과는 단순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소멸을 이끄는 큰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는 지방 유입력을 저하시키고, 지방대학의 입시 미달을 이끌며, 지방대학의 폐교로 이어지고, 구인난을 겪는 기업의 탈지방으로 이어져 지방 소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청년들이 일자리, 대학 진학 등의 이유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수도권은 인구 증가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도시 규모가 2배가 되면 노동생산성이 5~10% 증대)되고,

일자리와 교육환경개선이 또다시 인구 유입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2019년 이후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수도권은 중주도시화됐다.

학업, 직업과 문화 접촉 기회 등의 이유로 지방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는 지방활력 저하, 지역인구 감소, 지역경제 위축의 주요 원인이 됐다.

국토의 균형발전, 문화의 다양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방 소멸의 악순환 고리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결국은 학업과 직업을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기업들의 발전 가능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의 발전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인구 유출을 막는 담으로 지방대학 육성, 둘째,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의 지역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셋째, 지자체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다.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며, 지역기업은 지역대학 졸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이끌며,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지원과 기업기원을 통해 지역상생발전 생태계를 구축해 지방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

어찌할 수 없는 세대라는 패배주의에 빠져 지방의 산·학·관이 지역소멸을 막을 지역상생발전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80년대 압축성장 시기 이촌향도 그 이상의 사회적 변화와 혼돈 속에서 지방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역소멸, 지자체와 기업과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막을 수 있다.

시설

광주·전남지역 최우선 과제 무엇인가

경북도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이 1,000조원 이상 민간투자 유치 계획을 밝힌 것에 발맞춰 조만간 ‘경북도 100조 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재산에 성공한 이철우 지사가 민선 8기에 강력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경북지역에는 삼성과 한화 등 협력업체들이 모여 있어 이 같은 기업유치특별위원회 발족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강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구는 변화와 개혁을 주창한 홍준표 당선인이 곧 민선 8기 입성하면 현안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홍 당선인은 차기 시장 최우선 과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선정했다. 대구는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인 통합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특별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기존 기부 대양여 방식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윤석열 새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 약속을 확고히 받아내자는 의미다.

신공항 건설과 부지 개발 사업에 지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경북지역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매우 활발하게 관련 사업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은 상대적으로 너무 더디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초민감 사안으로 민선 8기로 넘어간 상태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두 지역 상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항 이전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경우도 공항 이전 계획에 따라 도시 발전상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군공항이 떠나는 부지 개발 효과와 공항 이전을 받는 전남지역의 커다란 개발 인센티브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의 통합 문제는 민선 8기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좌우하는 최대 현안이다. 한반도 서남권이 좀 더 분발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와 전남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방점을 찍은 만큼 이에 대한 행보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혁신만이 살 길이다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압승, 민주당 참패로 끝났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볼 때 국민의힘이 17개 시도지사 중 호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했다.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구태를 답습하다 자멸하고 말았다. 광주 투표율도 37.7%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50.9%를 크게 밑돌았고 4년 전 지방선거 득표율 59.2%와 비교해서도 20%포인트 이상 크게 떨어졌다. 불과 3개월 전 치러진 20대 대선의 투표율(81.5%)에서 절반 이하로 폭락했다. 이는 민주당 독점 구도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대선 패배 이후에도 ‘반성 없고, 달라지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원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여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면 “민심의 회초리” 운운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했지만 실천이 따르지 못했다. 20대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이로 패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찢판(찢지만 잘 싸운 선거)이라 민심을 왜곡했고, 반성에는 인색했다. 범 민주당 180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주와 횡포는 대선 이후에도 계속됐다. 위장 탈당과 회기 조개기 등 온갖 폄수와 편법을 동원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처리한 것도 부메랑이 됐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잘한 것도 없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두세 번 이겼다고 오만하게 굴면 민심은 금방 돌아선다.

지금 민주당이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을 하지 않으면 2년 뒤 총선에서 의회 권력마저 뺏길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심은 한번 등을 돌리면 대권, 지방권력, 의회권력을 연속해서 한 곳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친문·친명 갈등 등 당내 세 싸움 모습만 보인다면 민심은 완전히 견잡을 수 없다.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주역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재창당에 가까운 혁신을 해야 2년 뒤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

광주·전남 상생·협력, 선택 아닌 필수

기지수첩



오선우

정치부 기자

낙후된 농어촌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 지속적인 인구밀도 감소까지.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광주·전남이 신음하고 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초광역 협력 시대’가 바야흐로 막이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전남 미래 4년을 책임지게 된 강기정·김영록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하며 공약했던 것도 바로 광주·전남 상생·협력이었다.

양 당선인은 후보였던 지난달 16일, 당선을 전제로 취임한 후 광주·전남 상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 정책협약을 맺었다.

양 당선인 모두 당장 행정을 합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경제부터 일단 추진한 이후 차례

대로 행정, 생활권 통합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과연 오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선다. 당선의 기쁨에 취해 자신감이 넘쳐 있는 취임 초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양 당선인이 상생·협력을 외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과거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민선 7기 출범 한 달 만에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 공항으로 통합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서로 조건만 내세우며 책임 공방에 매몰돼 감정의 골만 깊어진 채 무산됐다.

시·도 간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한 상생발전위원회도 무용지물이다. 민선 7기 4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민선 8기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만사가 뜻대로 될 것 같은 기분으로 하늘에 붕 떠 있는 허니문 기간에서는 어떤 약속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양 당선인은 자신의 지역을 행기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하나 내주고 하나 챙기는 식의 장사꾼 심리로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상생·협력을 완성할 수 없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editorial.

Advertisement for Jeonnam Daily featuring the newspaper logo and a QR code, with the text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Honest newspaper, fair newspaper).